



##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박현석 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장)

### 21대 국회의 시급한 중장기 의제는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 11월에 “국회의원의 미래인식 조사” 실시
  - 300명의 재적의원 중 총 153명의 의원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구성은 남성 121명-여성 32명, 지역구 120명-비례 33명, 더불어민주당 87명-국민의힘 56명-정의당 5명-그 외 5명으로 성비와 정당분포는 실제 분포와 유사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에 비해 다소 과대대표 되었음
- 총 11개의 미래의제(<표 1>참조) 중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음
- 1순위 응답만 합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를 가장 시급한 미래의제로 꼽았음
-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결과를 순위와 무관하게 합산한 결과 64.7%의 응답자들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3순위 이내로 선택했고, 뒤이어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39.2%)와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38.6%) 해결을 선택(<표 1>)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가장 많은 의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중요 의제로 선택
-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사회보험 개혁 및 노동시장 정책은 국민의힘의 경우 각각 23.2%의 응답자들이 3순위 이내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4.9%와 9.2%의 의원들만이 3순위 이내의 의제로 선택하여 정당별로 관심도의 차이를 보임
- 정의당 의원들은 1순위 선택에서 총 5명중 4명이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을 선택했고,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선택한 의원은 없었음 3순위까지 합산 결과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각각 2명의 선택을 받아 공동 2위로 나타났음

[표 1]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미래 이슈 (1~3순위 합산)

	합계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규제 완화	새로운 노사 관계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 대처/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한반도 평화 (북핵통일)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교육 개혁과 평생학습 사회	미중 경쟁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안보	기타
	%	사례수	%	%	%	%	%	%	%	%	%	%	%	%
전체	100.0	153	20.9	15.0	64.7	30.7	38.6	18.3	20.9	39.2	24.8	7.8	17.0	2.0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9.2	9.2	72.4	34.5	47.1	14.9	20.7	41.4	26.4	8.0	14.9	1.1



정당별	국민의힘	100.0	56	39.3	23.2	55.4	26.8	19.6	23.2	23.2	39.3	19.6	7.1	19.6	3.6
	정의당	100.0	5	20.0	40.0	40.0	.0	100.0	20.0	20.0	20.0	20.0	.0	20.0	.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100.0	.0	100.0	.0	.0	.0	.0	.0	.0	.0
	시대전환	100.0	1	.0	.0	100.0	100.0	.0	100.0	.0	.0	.0	.0	.0	.0
	무소속	100.0	3	.0	.0	33.3	33.3	33.3	.0	.0	33.3	100.0	33.3	33.3	.0

중장기 미래정책의 쟁점:  
(1) 복지정책

- 이번 조사에서는 불평등 해소 및 사회보험 개혁을 포괄하는 질문으로 향후 10년뒤와 2050년의 두 시점을 고려하여 ‘재정안정과 선별적 복지’ 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보편 복지’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도록 질문하였음
-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문제와 재정안정성 문제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문제이지만, 정치권의 논쟁구도를 살펴보면 효율적 재정지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선별복지를 지지하는 주요 논거로 제시됨
- 현재 진행중인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10년 이내를 고려할 경우 50.3%의 응답자들이 선별복지를 선택하였고, 49.7%가 보편복지를 선택하여 의원들의 선호가 양분
- 정당별로 살펴보면 70.9%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편복지를 선호하였고, 국민의힘 의원의 87.5%가 선별복지를 선택. 정의당은 5명중 4명이 보편복지를 선호
- 2050년을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편복지에 대한 지지가 61.2%로 증가하였고, 변화의 대부분은 10년뒤를 고려할 때 선별복지를 선택하였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보편복지를 선택한 데에 따른 결과임
- 복지정책, 연금 등 사회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는 당파적 선호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안으로 전형적으로 양당간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이슈로, 양당 모두 현상유지를 선호하지 않는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원내 다수를 점유하는 야당 사이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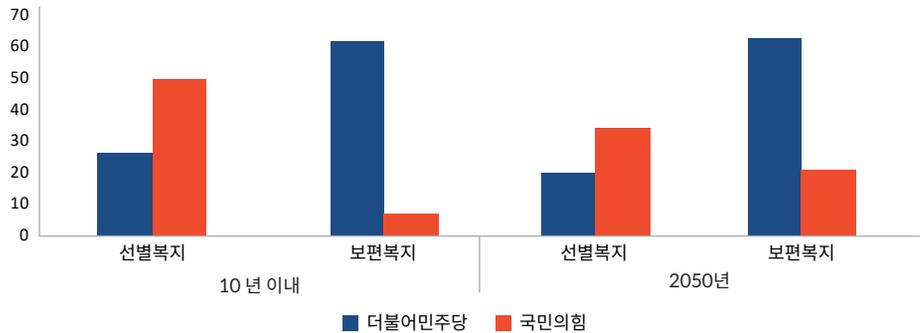
[표 2]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10년 이내)

		합계		① 재정안정과 선별복지	② 재정책대 통한 보편복지
		%	사례수	%	%
전체		100.0	153	50.3	49.7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7	29.9	70.1
	국민의힘	100.0	56	87.5	12.5
	정의당	100.0	5	20.0	8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33.3	66.7

[표 3]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2050년)

		합계		① 재정안정과 선별복지	② 재정책대 통한 보편복지
		%	사례수	%	%
전체		100.0	147	38.8	61.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2	24.4	75.6
	국민의힘	100.0	55	61.8	38.2
	정의당	100.0	5	40.0	60.0
	기본소득당	100.0	1	.0	100.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33.3	66.7

[그림 1] 양대 정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단기 선호와 중장기 선호(명)



중장기 미래정책의 쟁점:  
(2)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장 정책의 영역에서는 노동조건 격차 해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음
- 향후 10년과 2050년의 두 시점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와 '고용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중 하나를 선택
  - 10년 이내 시기에 필요한 정책으로 65.1%의 국회의원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9%는 고용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들은 84.9%가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택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들은 32.1%만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택하였음. 정의당 소속 의원 응답자는 총 5명중 4명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선택
  - 2050년을 고려하는 경우 58.9%의 응답자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41.1%가 고용 관련 규제완화를 골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답자의 69.1%, 국민의힘 의원 응답자의 41.8%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선택
  - 10년 이내의 단기선호와 2050년을 고려하는 중장기선호를 비교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선택한 의원이 다소 줄었고, 국민의힘은 다소 늘어났음. 정당 내부의 분포를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달리 10년 후에 비해 2050년을 고려할 때 정책선호가 양분되는 경향을 보임(<그림 2>)
  - 당파적 선호가 지배적인 경우와 달리 당내의 지배적인 선호가 약화되는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도파,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도파 등의 조합을 통해 정당간의 타협의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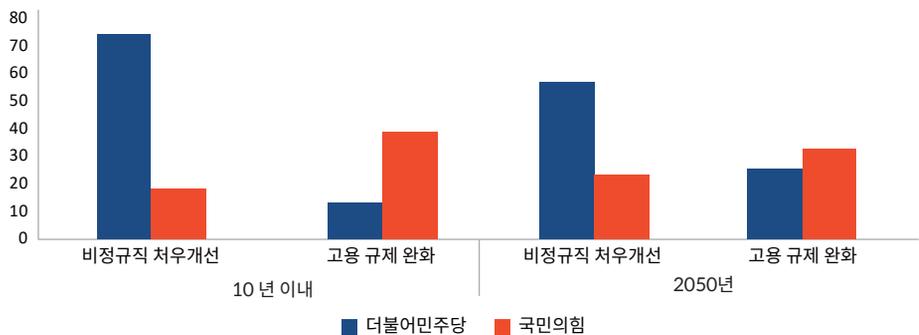
[표 4]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방안 (10년 이내)

	합계		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② 고용관련 규제 완화	
	%	사례수	%	%	
전체	100.0	152	65.1	34.9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100.0	86	84.9	15.1
	국민의힘	100.0	56	32.1	67.9
	정의당	100.0	5	80.0	2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100.0	.0
	무소속	100.0	3	66.7	33.3

[표 5]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방안 (2050년)

	합계		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② 고용관련 규제 완화	
	%	사례수	%	%	
전체	100.0	146	58.9	41.1	
표안정	더불어민주당	100.0	81	69.1	30.9
	국민의힘	100.0	55	41.8	58.2
	정의당	100.0	5	60.0	40.0
	기본소득당	100.0	1	100.0	.0
	시대전환	100.0	1	.0	100.0
	무소속	100.0	3	100.0	.0

[그림 2] 양대 정당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단기선호와 중장기 선호(명)



결론

- 국회의원들은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21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꼽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양극화의 중요성에 대한 온도차 존재함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연금 및 사회보험 개혁, 노동시장 정책 등에 대해서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음
-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극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술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고, 대통령이 주요 의제로 제시한 연금개혁 및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 안정성과 복지정책의 확대방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파적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지급률 혹은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 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감안하면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타협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됨
- 노동시장 정책은 양대 정당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정책에 비해 당내 의견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복지정책에 비해서 양당간의 타협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됨